

대법원 2016도1403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등 사건

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이기택)은 2018. 4. 12.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등 사건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 홍원식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, 피고인 김웅(남양유업 전 대표이사)에 대하여 일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6도1403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가. 공소사실의 요지¹⁾

1) 피고인 홍원식

● 증여세 포탈

- 피고인 홍원식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영의 아들이자 남양유업의 회장임
- 피고인 홍원식은 2007년 11월경 홍두영으로부터 자기앞수표 합계 52억 원을 증여받았는데, 위 돈은 홍두영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, 그림 2점을 구입하면서 차명계좌 명의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회계처리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 명의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가장함
- 그 후 홍원식은 위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 원을 포탈함

● 상속세 포탈

1) 상고심의 주된 판단 대상만 기재함

- 피고인 홍원식은 홍두영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들에 대한 상속세 41억 원 상당을 포탈함

- 양도소득세 포탈

- 피고인 홍원식은 남양유업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%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회사 주식의 대주주이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
- 피고인 홍원식은 남양유업 직원 또는 거래처 사장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약 32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아 함께 6억 5,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함

2) 피고인 김웅

- 피고인 김웅은 남양유업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임
- 피고인 김웅과 홍두영은 이치웅을 감사, 이필영을 고문으로 선임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급여인 것처럼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함
- 2005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약 6억 9,000만 원을 횡령함

나. 원심의 판단

1) 피고인 홍원식 ⇒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만 유죄, 나머지는 무죄

- 52억 원 중 일부는 그림 2점 구입에 사용되었고, 나머지 현금은 피고인 홍원식이 보관하고 있었는데, 피고인 홍원식은 홍두영의 사망 이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함
- 검사는 피고인 홍원식이 위 그림 2점과 현금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홍두영의 생전에 5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, 피고인 홍원식이 홍두영의 생전에 5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- 피고인 홍원식이 상속세,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나,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
2) 피고인 김웅 ⇒ 일부 유죄(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, 일부는 손해 발생을 부정하여 무죄)

- 피고인 김웅이 회사 고문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과 감사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별개의 업무상 횡령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음

- 고문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

- 피고인 김웅이 회사 감사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1인 감사가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회사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짐

- 남양유업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▣ 피고인 홍원식이 홍두영 생전에 5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는지
- ▣ 피고인 홍원식이 ① 홍두영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, ② 차명주식을 처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'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'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는지
- ▣ 피고인 김웅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(법리상 포괄일죄의 인정 여부)
- ▣ 형식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횡령죄의 성립 관계

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 (일부 무죄 및 면소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▣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음
- ▣ 조세포탈죄, 횡령죄,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세포탈죄,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